

## 도내 치매환자 1만2365명... 유병률 7.97%

오늘 치매 관리 중요성 알리는 '치매 극복의 날'  
생활 방식 바꾸고 조기 검진으로 치매 극복 가능  
제주치매안심센터 11곳 운영... 인식 변화는 과제

9월 21일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정된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정서적·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유지가 필요하다.

중앙치매센터의 2021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추정 치매 환자는 91만727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7.24%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3%로 39.7%를 기록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이 36.66%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80-84세 26.73%, 75-79세 20.72% 등 고령자일수록 치매 환자가 많았다.

제주지역 추정 치매 환자는 1만2365명으로 제주시가 8143명, 서귀포시가 4221명이다.

제주시 추정 치매 유병률은 7.79%, 서귀포시 추정 치매 유병률은 8.35%를 나타내 제주 평균 추정 치매 유병률은 7.9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다. 제주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곳은 전남 9.02%, 전북·충남 8.61%, 경북 8.2%였으며 가장 낮은 치매 유병률을 보인 곳은 울산으로 5.51%였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현재까지 완

치가 가능한 치료약이 없어 약물치료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생활방식이나 식습관 등 비약물적 접근을 통한 치료법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예방과 상담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치매 예방 수칙 3·3·3'은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방식이다.

먼저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고 생선과 채소를 포함한 식사, 책이나 신문을 읽고 쓰는 독서를 즐기는 습관 등 3가지 행동이 필요하며 술은 절제하고 금연하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뇌손상을 예방하는 등 3가지를 참아야 한다.

또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건강검진을 받고 가족·친구와의 소통,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 등 3가지를 챙겨야 한다.

제주에는 제주자치도광역치매센터 등 총 11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준혁 제주도광역치매센터장은 "전 연령층에 걸쳐 치매라는 병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족과 주변에서 치매 위험 요인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조기 검진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섭지코지에서 추억을... 20일 서귀포시 성산을 섭지코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성산일출봉과 제주바다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탄력 전망

국회 행안위 소위, 어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조성사업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20일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법안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했지만, 올해 2월 국방부와 제주도의 협의에 따라 10년으로 수정됐다. 또한, 수정 법안은 알뜨르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최종 의결될 경우 세계평화 섬 지정과 연계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

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발의됐고,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구성 후, 올해 2월 무상 양여 대신 무상 사용허가로 협의를 완료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해 14일 국방부와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허가 특별규정을 최종 논의하며 정부의 수정 합의사항을 점검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우도해상케이블 무산되나  
도, 사업계획서 반려 결정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원을 투입해 우도-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제주특별법' 제35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속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

우도 케이블카 노선은 부속이한 공공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분선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 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2분1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대모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289  
잠정집계 20일 누적 33만1682  
<17시 기준> 누적

평생 어부바  
신협

# 제주지역 신협 자산 5조원 달성

신협을 사랑해주신 조합원과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동안 받은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제주중앙신협	제주신협	대정신협	제상신협
한라신협	중문신협	위미신협	삼다신협
도평신협	표선신협	안덕신협	동주신협
보목신협	구좌신협	제주동부신협	애월신협
서귀포동부신협	제민신협	제주Y신협	늘푸른신협
금빛신협	고산신협	성안신협	제주치과인사신협
서귀포신협	제주서부신협	신제주신협	사라신협
			동광신협